

시론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 '기업 유치'가 결정



주정민 전남대 대학원장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시도민은 단순히 두 지자체의 행정 결함을 넘어, 이번 통합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지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시인 서울과 같은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행정통합 하나로 수십년간 쌓인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다만 40년간 분리돼 겪어왔던 행정적 불편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더 넓은 시야에서 대규모 미래 계획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한 기회다.

그렇다면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의미의 '특별성'을 갖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답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 좋은 일자리가 풍부해지면 사람이 모이고, 교육과 문화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들어서면 자체 고용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전후방 산업의 연쇄적인 고용 창출이라는 '낙수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곧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지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실제로 대기업 유무에 따른 경제 지표의 차이는 극명하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기업이 가장 밀집한 울산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대형 제조 시설이 모인 울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24년 기준)은 약 8천519만원으로 서울(6천122만원)을 훨씬 상회한다. 이는 광주(3천788만원)나 대구(3천137만원)보다 2~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전남 지역 내의 경제 격차 역시 뚜렷하다. 24년 국가통계포털(KOSIS) 발표에 따르면, LG화학 등 국가산단인 위치한 여수시의 1인당 GRDP는 약 1억1천만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시는 약 7천100만원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뚜렷한 대기업이 없는 목포시는 약 2천100만원 선에 머물러 있다. 인접한 영암군(대불산단)과 합산해 보아도 약 4천300만원 수준에 그쳐, 여수나 광양과 비교하면 미치지 못한다. 대기업 유무가 도시의 체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는 쉽지 않은 과제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단순히 부지가 저렴하거나 소소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인재 수급이 용이한지, 물류를 위한 교통망과 전력·유수 등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지를 꼼꼼히 따진다. 나아가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까지 고려한다.

따라서 정부와 통합특별시 지자체의 과격적인 제안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법인세·소득세 면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춰줘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규제 완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완벽한 산업 인프라 공급,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안해야 한다. 기업이 "이 지역에 가면 리스크 없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100% 준비된 시나리오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특별성'을 갖추고 미래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칼럼

남성을 힘들게하는 '전립선 비대증'



곽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내선부가 비대되어 배뇨관, 빈뇨(야간뇨 포함) 같은 배뇨 관련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립선이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으로 정자와 섞여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를 만드는 남성 생식기관이다.

젊을 때에는 전립선이 균등하게 커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요도 옆의 이형대 부위가 집중적으로 비대해진다. 이로 인해 요도를 막아 소변의 흐름이 감소하거나 막힐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변배출에 문제가 생겨 방광벽이 두꺼워지거나 수축력이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으며, 대개 노화로 발생하나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 등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거나(빈뇨), 소변을 오랫동안 보거나(지연뇨), 소변을 다 본 후에도 개운치 않거나(잔뇨), 소변 시간이 소변을 보거나(야간뇨), 소변이 마려우면 조금이라도 참을 수 없거나(절박뇨) 등의 하부 요로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증상의 정도와 전립선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요로증상으

로 인해 방광의 소변이 비워지지 않으면 소변에서 세균이 성장하여 요로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소변 찌꺼기로 인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신장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하부 요로증상, 전립선 크기 증가 등이 확인돼야 한다. 진단 검사로는 소변검사에서 혈뇨 및 요로감염의 유무를 파악하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를 통해 PSA 수치의 상승을 보이면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다.

신체진찰에서는 직장 수지검사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을 직접 촉진해 전립선이 비대해져있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해본다. 배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요속 및 잔뇨량 검사, 압력 요류검사, 방광경 검사 등을 통해 요도가 어느정도 폐색되었는지를 검사한다. 그리고 '경직장초음파' 검사로 전립선의 크기 뿐 아니라 모양 및 전립선 내 이상징후를 관찰해 진단한다.

전립선 비대증은 무증상이라면 전립선 크기에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없다. 하지만 하부 요로증상을 보이는 경우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법은 양방의학의 약물치료, 수술치료와 한방의학의 침구치료, 한약치료가 있다.

약물치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은 알파 차단제로, 전립선 요도의 압력과 긴장을 낮춰 방광근육을 이완시켜 배뇨를 원활하게 해준다. 하지만 혈압 강하 효과로 인해

어지러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는 5-알파환원 효소 억제제도 약물치료에 처방된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 소변의 흐름을 개선해주지만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약물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인 요로감염, 혈뇨, 요폐색 등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수술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로 내시경을 삽입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절제하는 것이다. KTP 레이저 수술이나 관혈적 전립선 적출술 등의 방법 또한 시술된다.

침구치료는 비뇨기계 질환을 다스려주는 혈자리를 치료하거나, 방광 및 요도 괄약근과 관련된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방광괄약근과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추체근에 침을 자입한 후 전기자극을 보내어 전립선치료를 통해 괄약근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법이 효과적이다.

한약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약을 선택해 처방한다. 고령의 환자에서 야간빈뇨를 보이며 몸이 냉한 경우에는 우차신기환(牛車腎氣丸)을, 소변량이 줄어들고 입이 마르면서 어지러움을 보이면 저령탕(猪苓湯)을,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방광경련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귀약감초탕(當歸芍藥甘草湯)을 처방한다.

비뇨기계 증상이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길 바란다.

社說

전남광주 'K-교육특별시' 소통과 협력에 성패 달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시민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일주일 동안 시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4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아이디어와 바람을 반영한다. 질의 항목은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교육, 학군 및 입학 전형, 지역 상생 및 소통 등 10개로 엮었다. 교직원 2천명에 대한 별도의 온라인 설문에서는 교육정책 방향, 행정조직 형태 및 인사 제도 운영, 지역 상생 등 실무 중심 17개 문항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전남·광주지역 분야별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대학, 자치단체 등 전문가들로 '시민소통위원'을 구성하며, 개방형 플랫폼 '준비위에 바란다'도 가동에 들어간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시·도교육감도 함께 선출하지만 정작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깜깜이' 우려가 컸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는 초광역 행정통합에 따라 막강한 권한이 더 집중됐음에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초반에 후보들이 난립했으며,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유

권자의 발길은 더 멀어졌다. 인수위가 내건 K-교육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과 공감대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서로 다른 여건에서 그 정체성을 존중하며 안정적인 화합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각기 도시와 농산어촌 중심의 특수한 차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고를 다해야 한다.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모두 합쳐지는 게 아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초기부터 빈틈이 없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켜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정립하는 과제이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최우선 지원하고 협력한다. 최교진 장관이 직접 방문해 조직과 시스템 등 추진 상황을 살폈다.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성숙시키는 새로운 역사 앞에 섰다. 지역 소멸에 맞서 사람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김 당선자는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크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양 기관은 물론 시도민, 학교 구성원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교육특별시를 완성해야 한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한 진상규명이 먼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박탈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 비판했다. 지역대학가도 6·10민주항쟁 기념일 전국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전남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선배들과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조선대도 "행정의 준비부족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더 이상 의심받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태우 선관위위원장이 "책임은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해 물러난 것은 미봉책일 따름이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개표소 봉쇄 시위에는 참가자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손팻말과 성조기를 흔드는 등 과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지역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물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정당한 투쟁의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악용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대 회동에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들도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 중사자 대화방을 확보하고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 인쇄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대응해야 한다. 이 대통령 지시로 검정 합동수사본부도 꾸려져 활동에 들어간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특검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독립적 국가기구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되고 있다.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항의에 편승해 사회 갈등을 유발해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조직적 발호가 수상쩍다. 빛의 혁명을 통해 회복한 민주 헌정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취약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 혁신에 착수해야 하겠다.

취재수첩

무소속 돌풍이 던진 경고장...무안군의회, 달라져야 한다



김상호 지역특집부 부장

6·3지방선거에서 무안군 유권자들은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고 낙선했는지를 넘어 지역 정치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와 경각이 담긴 선거였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은 무안 정치가 변화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무안군의회는 사실상 특정 정당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돼 왔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경쟁에 있다.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단일함이 생기고, 견제가 약해진 곳에서는

변화도 더디질 수밖에 없다. 특정 정당이 오랜 기간 의회를 주도하게 되면 군민보다 정당을 먼저 의식하는 정치가 나타날 위험도 커진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간편보다 사람을 선택했다. 후보의 능력과 현상성, 주민과의 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표를 던졌다. 무소속 돌풍은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지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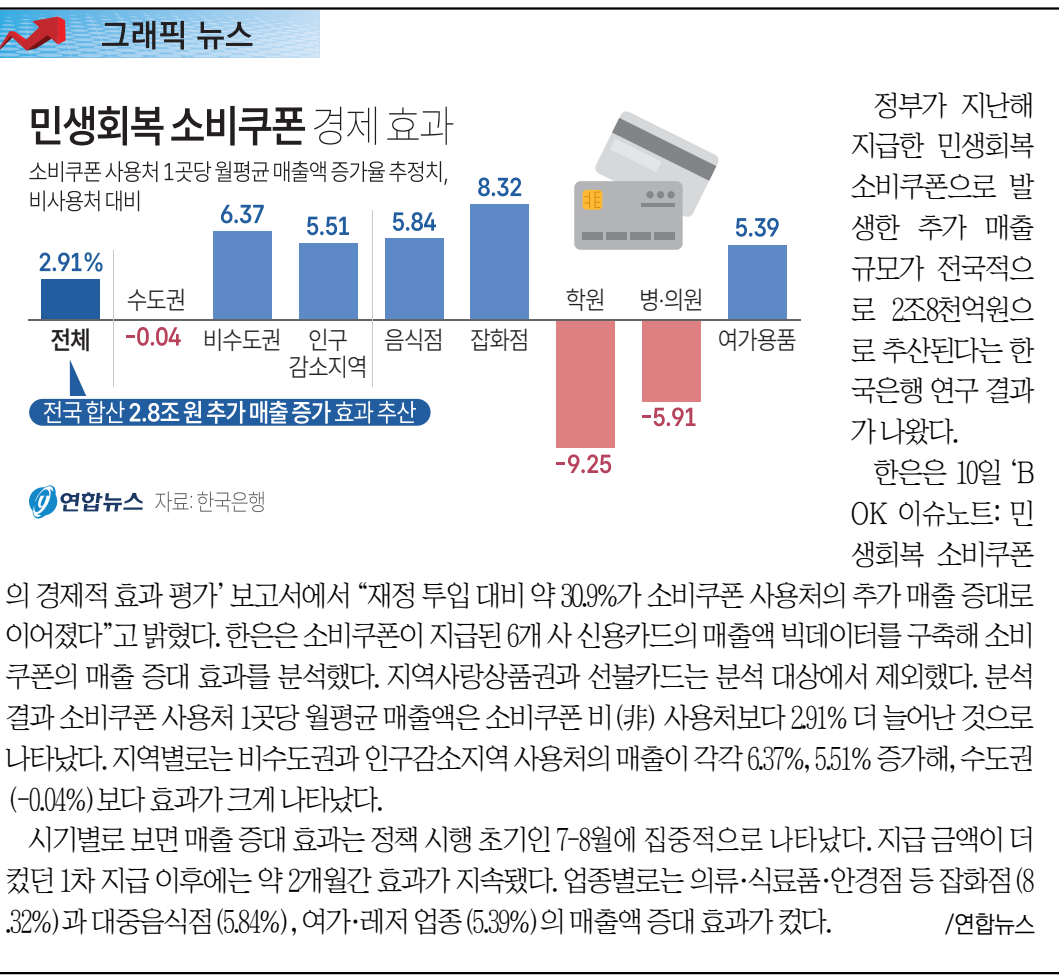
무안군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농어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군민들이 체감하는 의회의 역할과 존재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의장단 구성 과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다는 인식

이 남아 있는 한 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은 쉽지 않다. 지방의회의 권력은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이번 무소속 돌풍은 군민들이 보낸 변화의 명령이다. 더 투명하게,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다. 무안군의회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정책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인가.

민심은 이미 움직였다. 변화의 신호를 읽지 못한 정치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무소속 돌풍은 특정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무안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경고장이자 신호탄이다. 무안군의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군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